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1심 승소

재판부 “국가면제 인정
어려워… 재판권 행사”
국제재판관할권
손해배상 책임 모두 인정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가 들어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나온 국내 첫 위안부 관련 판결이다.

법원은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이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경관은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국제 관습법인 주권면제가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 우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문제였다”며 “이 사건 행위는 사법적(私法的) 행위가 아니라 주권적 행위”라고 정의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외국 국가가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행한 행위는 주권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외국 국가의 주권적 행위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록 이 사건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우리 헌법 및 세계인권선언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 ▲주권면제의 실제배상 권리 및 이론의 가변성 ▲비엔나협약에 따른 절대규범(국제 강행규범)의 가치우월성 ▲협상력, 정치적 권력이 없는 개인은 소송의 손해배상의 방법이 없다는 한계 ▲주권면제는 절대규범을 위반한 국가가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

성된 이론이 아닌 점 등이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행위의 일부가 한반도 내에서 이뤄졌고,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라며 “대한민국은 이 사건 당사자들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피고의 행위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직접 주장하지는 않지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끝난 뒤 위안부 측 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는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간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지 않나”고 소감을 밝혔다.

/뉴시스

‘강한 전북, 살기 좋은 익산’ 만든다

민주 김수흥 의원, 올 한해 의정활동 계획 보고·비전 선포
초심·시민과의 신뢰 강조, 정치권에서 지역 위상 강화 각오



김 의원은 또 기업 유치에 올해 최우선 활동 과제라고 밝히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익산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유치를 주력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아울러 ‘지방장소도시육성법’ 입법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우선 이전과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 등을 유도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이 새해 맞이 일성으로 ‘강한 전북,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공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원활한 진행을 비롯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역경기 회복 의지를 담은 신년 의정활동 계획을 지난 7일 밝

혔다.

김 의원은 가정 먼저 초심과 시민들의 신뢰를 강조했다.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사태 해결 노력과 LH평화주거환경개선사업 정상화, 용포면 소각발전시설 허가 반려, 왕궁현업축사 매입, 합라면 연화천 수해 예방 등 시민들과 했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음을 제시했다.

익산과 전북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전북의 위상을 높여준다는 각오도 전했다.

다가올 선거에서 지역민심이 정책과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수흥 의원은 “182만 전북도민과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면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강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자영업자 눈물 어떻게 닦아줘야 하나” 울컥

정세균 총리, 국회 긴급현안 질문
‘영업 못하는데 임대료 부담’ 사연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면서 임대료 등 부담을 견디는 자영업자들의 문과 관련 질의 눈시울을 붉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코로나19방역·백신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관련 질의에 응답을 주고 받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문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 답변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지영업자 대한 발언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이치를 보면 그게 온당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런 저런 입법도 발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 분이 내고 있는 임대료가 800만 원이라고 했죠. 그 임대료를 영

업을 하지 못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라며 말을 잊지 못하다 “정말 힘든 일이다”라고 했다.

고개를 떨군 정 총리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제가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주례회동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께 말씀을 올리고 함께 걱정하기도 했다”며 “지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대책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文대통령, 오늘 공식 신년사... ‘일상회복·선도국가’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11일 신축년(辛丑年)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공식 신년사를 발표한다. 신년 메시지, 국무회의, 신년 인사회 등 여러 단위를 통해 밝힌 메시지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 신년사에서 상생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하고 그 힘으로 선도국가로 향할 것이라는 점

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를 회복·통합·도약의 해로 규정하고, 오랜 방역에 지친 국민들에게 일상 회복을 약속했다. 한국판 뉴딜의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11일 공식 신년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인 국정운영 구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